

일반  
논문

## 부랑인 수용소와 사회적 고통

피해생존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유혜정 \_ 성공회대학교 연구위원

### 논문요약

본 논문은 1960~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의 부랑인 정책에 의해 강제 격리, 구금 됐던 이들의 수용소 경험과 그에 따른 고통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산개척단,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이들이 생애 전 과정에서 경험한 고통이 사회적 고통임을 증명한다. 이 고통은 ① 부랑인 수용소에서의 폭력적이고 과밀적인 경험 ② 부랑인 화됨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부적응 ③ 사회적 편견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위축, 침묵의 강제 ④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생, 출현, 강화되었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고통이 사회화되기 보단 개인화·개별화됨에 따라 무력감, 자기비하, 죄책감 등에 시달려왔으며, 사회적 분노와 원망을 갖게 됐다. 고통은 외상 증후로도 발현되어 일상생활의 영위와 가정적·사회적 관계 구축, 개인의 존엄 회복에 큰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다. 과거 청산과 정치적 책임을 통한 사회적 치유가 시급한 이유다.

■ **주요어:** 사회적 고통, 트라우마(외상), 서산개척단,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OI: <http://dx.doi.org/10.31008/MV.39.9>

##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부랑인(아) 정책의 폐해가 사회화되고 있다. 2000년 이래 간간히 부랑인 정책의 폐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긴 했지만, 피해생존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방송, 영화, 연극, 책 등이 만들어지고, 피해생존자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그 존재를 드러낸 것은 최근 몇 년 안팎의 흐름이다. 피해생존자들은 청원, 기자회견, 농성, 국토대장정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랑인 수용소의 참상을 폭로하고, 당시 부랑인 정책의 폭력성을 증언하고 있다. 또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생존자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지만 한편으론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들이다. 동시대를 살았으나 매우 비동시대적인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체험과 그에 기반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랑인으로 지목돼 공권력에 의해 ‘후리가리’(일제 단속)된 이후 수용소에 강제 격리·구금되면서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상황에 놓였다. 또 수용소에서 강압적으로 부랑인화되면서 수용소 이후의 삶 역시 매우 다른 개인적, 역사적 경험을 해왔다.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생존자들의 경험과 삶은 사회적 고통이 되거나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피해자 중 많은 수가 부랑인 수용소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고, 생존자들은 다시 잡혀갈 수 있다는 공포에 몸을 숨겼다. 수용소 경험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욕과 냉대를 야기하는 일이었기에 피

해자임을 감추기도 했다(유해정 2018, 78). 많은 생존자들이 심각한 외상을 입으며 입을 단았고, 부랑화됨으로써 사회 빈곤층으로 전락해 소거됐다.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불온시하고 억압했던 상황 역시 이들이 함구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배경이다.

사회나 국가 역시 폐해를 부인, 축소, 은폐하거나 망각으로 일관했다. 일례로 우리사회는 1987년 6월 항쟁 이래, 민주주의 정부로 이행하면서 점진적으로 과거사 청산작업을 진행해왔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포문을 열었다면 한국전쟁기 전후에 전국에서 발생한 양민학살과 제주 4·3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그 뒤를 이었다. 2005년 12월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설립돼 4년간 한국 현대사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과거사 청산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시간과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상당수의 국가 폭력과 인권침해 사건들이 진상 규명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철저한 규명 없이 종결됐다(정근식 2010). 부랑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1961년 완도국토건설사업, 1961년 서산개척단,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관한 진정이 접수됐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보다는 개별적 사건으로 처리됐으며, 진상 규명 역시 미흡했다. 또한 부랑인 정책은 과거사위의 주요 과업으로 부상하지 못했다. 과거 부랑인 정책의 실상과 폐해가 지금까지 침묵과 망각에 놓인 이유다.

학문적 고찰 역시 최근 들어서야 속도를 내고 있다. 해방 이후 권위주의 정권하의 부랑인 담론과 정책 관련한 연구들은 2010년 이래

로 활발해지는 추세다. 대한청소년개척단(김아람 2018; 2011), 자활근로대와 넝마주이(박홍근 2014), 형제복지원(신권철 2014; 이소영 2014; 주윤정 2018; 최종숙 2018; 하금철 2017) 등 일부 수용소 및 관련 정책, 담론, 사회사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피해생존자들의 경험과 고통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선감학원과 관련한 조사와 연구는 경기도(2017; 2018)와 국가인권위원회(2018)가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 차원에서 주도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학문적 변화는 피해생존자들의 사회적 출현과 이들의 증언 및 활동에 빚진 바 크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생존자들의 수용소 경험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수용소 이후의 이질적인 삶의 경로와 그에 따른 고통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흩어진 개인의 서사, 혹은 증언(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만 있을 뿐 학문적으로 고찰되지 못했다.

그동안 피해생존자들의 경험은 과거사의 문제, 한국 현대사의 불행한 개인사로 간주돼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들은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을 가중, 증폭시켜왔다. 하지만 정부 주도하에 부랑인 정책이 수립되고, 공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들의 인신이 단속, '수거', '수집',<sup>1)</sup> 격리되고 수용소가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통은 개인적

---

1) 이와 관련해 당시 자료들은 부랑인들을 '수거' '수집'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을 사물화하는 표현으로 당시 정부가 이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본고는 당대 정책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차원의 고통을 넘어 우리 사회가 만든 고통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수용소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이후의 삶이 구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생애적 고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에 대한 분석은 국가 폭력이 삶에 어떻게 침투하고 잔존, 변형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부랑인 정책의 문제를 재조명할 수 있게 해준다. 또 ‘지금-여기’ 상존하는 뿌리 깊은 부랑인에 대한 문화적 담론, 사회적 낙인과 맞물린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피해생존자들이 생애 전 과정에서 체험한 부랑인 정책의 고통에 주목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부랑인 정책에 의해 강제 격리, 수용됐던 이들의 생애 경험을 중심으로 부랑인 정책의 폐해와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을 사회학적으로 드러내고 분석하며 이해하는 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감각을 일깨우고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권위주의 정부 하에 대표적인 부랑인 수용소였던 세 곳,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형제복지원의 피해생존자들이 연구 참여자로 현장과 이론의 가교가 되어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생존자들은 부랑인 수용소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둘째, 수용소 이후, 피해생존자들은 어떤 삶의 경로를 밟아왔는가? 셋째, 이 과정에서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은 어떻게 변형, 존속했으며, 이것이 갖는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가?

## 2. 이론적 토대

### 1) 개념정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는 1960~1980년대 부랑인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 운영된 각종 집단 수용 시설들을 부랑인 '수용소'로 명명한다. 수용소의 운영 목적, 주체, 대상, 시기, 방식 등은 모두 상이하다. 하지만 부랑인으로 지목된 이의 강제 구금을 통해 인신과 정신의 심각한 통제를 가하는 한편 부랑인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소거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하금철 2017).

두 번째, 본고는 부랑인 수용소를 경험한 피해자들을 피해생존자로 명명한다. 이때 피해생존자란 부랑인 정책의 피해자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현재도 생존 중인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부랑인 정책의 피해를 사회적으로 증언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활동해오고 있는 피해 당사자라는 뜻이다. 수용소 경험자를 수동적 피해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 주체로 소환하고 위치시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피해생존자들이 경험한 고통을 사회적 고통(Social Suffering)으로 명명한다. 클라인만과 다스(2002)에 따르면 사회적 고통은 사회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 권력이 인간에게 미치는 총체적 결과물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의 고통에 관한 새로운 인식 틀

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일상에서 당연시 되는 사람들의 고통을 개별화된 경험이나 고통이 아닌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구조, 관계 속에 '내재된 폭력' 즉, 억압, 배제, 소외의 결과로서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재현함을 의미한다. 고통은 근본적으로 개인에 속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의 발생이나 내용, 강도 등은 사회 정책이나 국면, 또는 사회적 의미부여 등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이현정 2016).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의 원천은 국가의 부랑인 정책과 그에 따른 수용소 생활에 있다. 하지만 부랑에 대한 제도적·문화적 담론과 사회적 차별 등을 통해 이후 삶에서 고통이 증폭, 강화되어온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회적 고통이라는 명명과 접근은 국가 폭력에 기인한 인권침해라는 접근만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울 수용소 밖, 사람들 '사이'와 그 이후의 국가 작용에서 발생한 고통까지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또한 개별화된 피해생존자의 고통을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학문적 실천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이 고통을 트라우마(trauma), 즉 외상의 사회학적 모델을 토대로 접근, 분석한다. 잔학 행위로 인한 트라우마는 정치적·문화적 문제이기 때문이다(클라인만·다스 2002, 9).

## 2) 사회학적 관점의 외상이론

일반적으로 외상은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사고, 학대, 강간, 폭

력, 전쟁, 살인 등과 같은 끔직한 사건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외부세계에서 발생한 잔혹한 사건이 발생시킨 고통에 대한 정신의학적 진단인 셈이다. 그리고 이 외상의 충격으로 발생해 지속되는 심리적·정신적·신체적 증상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외상 사건이나 개인차에 따라 서로 다른 고통을 호소하지만 공포, 두려움, 무력감, 통제 상실, 자아 붕괴 등을 공통적으로 경험한다. 또한 관계의 단절,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은 물론 자존감과 자율성의 상실을 경험한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인격과 성격, 관계에 심각한 변형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외상의 심각성은 그것이 완벽히 치유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외상의 상흔과 영향이 일생동안 지속된다는 것이다.

외상을 다룸에 있어 주의할 것은 외상을 사건 자체에 내재된 것으로 정의하고, 의학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태도다. 이는 외상을 유발, 강화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또 외상이 의학적 증상으로만 간주될 때 피해자의 고통은 개인화·개별화되며, 피해자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된다. 이로 인해 외상에 대한 사회적 치유를 주창하는 운동이나 권리 담지자로서 피해자의 주체적 행위성을 설명하는 것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동일 사건에 대해 동일한 외상을 호소하지 않고, 나아가 일부는 외상에 따른 증상이 없거나 미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소외와 배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



다(최정기 2006).<sup>2)</sup> 증상이 없다고 해서 영혼에 새겨진 잔혹한 경험이 사라지거나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의 외상 연구는 외상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외상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외상의 본질은 사회에 있으며, “사건 이전-사건-사건 이후라는 연속적 스펙트럼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김명희 2016, 64)는 것이다. 또한 외상을 통해 인간과 인간관계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통찰해야 한다는 것이다(최현정 2015, 169).

허먼이 대표적이다. 허먼(2012)은 외상이 충격적 경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환경, 즉 외상이 개인화되는 방식, 외상 사건을 사회가 처리하는 방식 등에 따라 외상이 완화될 수도, 반대로 악화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강은숙 2011, 23). 외상은 일상적이며 관계적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외상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인간은 자아, 타자, 그리고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고 성장하며 생활하는데, 외상은 이 관계와 연결을 파괴한다. 즉 외상 사건에 따른 모욕과 죄책감, 무력감을 경험함으로써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존엄이 훼손된다.

---

2) 최정기(2006)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배상과 애도를 분석한 글에서, 당시 운동의 적극적 주체들이 신체적, 심리적 외상이 없어 이후 과거 청산의 주체에서 소외된 반면 단순 가담자, 혹은 우연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희생당하거나 외상을 입어 과거 청산의 주체로 호명된 경우의 문제를 제기하며 외상이 갖는 어려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사건 이전-사건-사건 이후라는 관점 하에서 외상 사건에는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구도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외상은 ‘힘없는 자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데(최현정 2014, 183), 이는 세상은 안전하고 세계에는 정의가 있다는 기본적 가정을 파괴함으로써 개인과 타인, 공동체 사이의 애착과 연결을 부수며 신뢰를 무너트린다. 따라서 외상 치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본적 애착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주변과 사회의 지지다. 지지하는 환경 없이는 외상 회복은 불가능하다. 동시에 “해악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허먼 2012, 128) 공동체의 실천이자 정치적 운동이 필수적이다. 외상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존재를 배척하는 분위기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악화시켜 더 큰 외상을 초래한다. 현대 외상 진단의 출발점이 된 베트남 전 참전 군인의 정신을 파괴한 것은 전투의 외상이 아니라 베트남전의 도덕적 양면성 그리고 미국 정부와 군의 기만이었다는 주장과 같은 이치다(와터스 2011, 148).

알렉산더(2007) 역시 외상을 사건 자체에 내재된, 즉 사건 자체에 대한 비성찰적이며, 즉각적이며, 자연발생적 결과로 보는 기존의 외상이론에 반대한다. 그는 외상을 사회구성의 산물로 보며, 문화적 외상이론(cultural trauma theory)을 제시한다. 외상을 문화적으로 본다는 것은 외상 사건의 사회적 재현에 주목함을 의미한다. 그는 외상 사건과 그 사건의 사회적 재현의 격차, 즉 ‘외상 과정’(trauma process)에 의해 외상이 결정된다고 본다. 사건의 의미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행위자의 의미 주장과 당대의 시민, 그리고 역사적·문화적·제도적 환

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건의 재현이 이뤄지고 외상이 결정된다  
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외상 과정에 따라 외상이 경감되어지고 사회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의식 변화가 수반될 수도 있지만 - 예를 들어 부  
랑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을 청산하고 과거 부랑인 정책을 반성하고  
피해생존자들의 상실을 애도하는 경험 - 반대로 고통이 개인화·개별화되  
거나 무시되며 증폭되는 퇴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외상에 접근하는 이런 이론들은 부랑인 정책의  
피해생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이해, 나아가 사  
회적 해결(치유)을 주장함에 있어 몇 가지 장점을 갖는다. 우선 피해  
생존자들의 고통을 개인적·개별적 고통이 아닌 사회적 고통으로 인  
식, 분석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한다. 두 번째, 수용소 경험이 과거  
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전 생애 과정을 관통하는 고통이라는 관  
점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현재 진상 규명 운동에 나서  
고 있는 피해생존자들의 행위를 고통을 치유하고 사회적 변화 - '긍  
정적' 의미의 문화적 외상 - 를 창출하기 위한 직접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구자가 주목하는 세 가지 측면들은 서로 밀접한 인과관계로  
맞물려 있다.

### 3. 연구 대상 및 참여자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피해생존자들의 수용소 경험과 그에 따른 고통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60~1980년대 사이에 운영된 수많은 부랑인 수용소 중 서산개척단,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출신 피해생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다. 사실 이 세 수용소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서산개척단은 법적 근거 없이 만들어지고, 지역적으로 유리된 공동체적 성격이 강했던 반면 선감학원과 형제복지원은 법적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폐쇄된 수용시설로 운영됐다. 수용소의 목적 역시 서산개척단이 폐염전 개간을 통한 사회 정착을 추구했다면, 선감학원은 ‘직업보도’와 ‘교호육성’(국가인권위 2018, 23), 형제복지원은 ‘복지’의 외피 속에서 운영됐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이 세 수용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크게 네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자료 접근성과 피해생존자들의 연구 참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랑인 정책 및 수용소와 관련돼 생산, 공개된 기록과 자료는 매우 빈약한 편이다. 또한 관련 자료나 기록, 증언들은 연역적이기보다는 특정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수용소별로 발견, 발굴되고 연구되는 특성이 있다(강덕영 2018, 2). 이를 감안해 현재 부랑

인 문제와 관련한 과거사 청산 운동을 주도하는 세 수용소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 직접적 국가 책임성이다. 서산개척단은 1961년 11월 자동차 조립공장을 하던 민정식이 조직해 관할했다.<sup>3)</sup> 하지만 이는 개인의 구상이라기보다는 부랑인을 국토건설 및 개발에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보건사회부 장관의 정착지시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김아람 2018, 6). 이후 개척단은 수용자들의 봉기로 민정식이 쫓겨나면서 1966년 9월 서산시의 관할 하에 놓였다가 해체된다. 하지만 수용자들의 노동에 기반해 폐염전에서 농지로 개간된 땅에 대한 수용자들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았고 모두 국유화됐는데, 이는 현재 피해생존자들이 해결을 요구하는 서산 개척단 문제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sup>4)</sup>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감화령에 근거해 설치된 이래 해방 이후에는 경기도 선감학원 조례에 기반해 운영됐다. 1982년 폐쇄 시까지 경기도가 운영 주체였고 당시만 해도 지

3) 김아람에 따르면, 민정식은 1954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조립공장에 부랑인 70여 명을 들였다고 한다(김아람 2018, 6).

4) 개척단 해체 이후 정부와 개척단 수용자들은 1968년 개간된 땅에 대해 1세대당 3천 평씩 기본배에 합의했으며 1968~1971년 5차례에 걸쳐 335세대에 기본배됐다. 하지만 애초부터 땅은 모두 국유화돼 개척단 수용자들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수용자들은 지난 22년간 탄원을 제기하고 5년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결국 2013년 이들은 10~20년 상환 조건으로 평당 5만 원씩 땅을 국가로부터 매입해야 했다(한겨레 2017/01/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8824.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8824.html)(최종검색일 2018/09/14).

방자치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국가인권위 2018, 23-24).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현재의 선감학원 문제에 대응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한편 형제복지원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훈령 410호에 의거 전국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로 성장한다. 형제복지원은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됐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전체 예산의 80%를 국고 및 시비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결산보고, 안전점검, 원생에 대한 행정지도 감사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에는 검찰개혁위원회가 1987년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권 남용과 법원 판결의 문제를 이유로 검찰총장에 수용자들에 대한 사과와 비상사고를 권고한 바 있다. 부산시를 넘어 국가 책임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세 번째 심각한 인권침해다. 운영 방법, 목적, 시기, 주체 등의 상당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세 곳의 수용소자들은 모두 일상적인 굶주림, 학대, (성)폭력, 고문, 강제노동 등 잔혹한 처우하에 놓여 있었으며,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일상적 공포에 노출돼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수용소 안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탈출을 기도하다 목숨을 잃었다. 강제 구금된 상태에서 자의적 퇴소는 불가능했으며 탈출과 수용소 외해, 그리고 죽음만이 사실상 외부로 나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하지만 국가책임성과 심각한 국가 폭력,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부랑인 정책에 대한 성찰, 수용소 운영의 진상, 가혹한 인권침해 및 구금 등에 대한 도의적·정치적·사법적 책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부랑인 기표에 대한 문화적 쇄신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진상 규명이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 역시 모두 좌절돼왔다. 이러한 현실은 부랑인 수용소를 경험한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연구 대상 선정의 마지막 이유다.

## 2) 연구 참여자

연구자는 서산개척단 피해생존자 3명,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2명,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3명 등 총 8명을 심층 면접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연구자가 형제복지원 구술기록집을 낸 인연으로 심층면접이 성사됐다. 그리고 이 활동이 밑거름이 돼 서산개척단과 선감학원 피해생존자와 연락이 닿았다. 서산개척단 피해생존자는 피해생존자 대표를 만나 소개받았다. 선감학원 피해생존자는 오랫동안 선감학원을 취재해왔던 인터넷 언론사 기자의 추천을 받았다. 성별에 따른 경험이 매우 이질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를 남성으로만 한정했다.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피해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우연히 서산개척단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는 60~70대인 반면, 선감학원은 모두 50대, 형제복지원은 모두 40대였다. 이 때문에 서산개척단의 경우 1960년 설치 당시부터 1966년 와해 당시까지, 선감학원은 1960년대 말~1970년대 초까지, 형제복지원은 1982~1987년 와해 당시까지의 운영과 경험, 그 이후의 삶에 집중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본 연구의 취지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심층 면접에 흔쾌히 함께해주었다. 각 사건은 물론 부랑인 정책 피해생존 자들에 대한 기록과 연구가 매우 적으며, 이들의 ‘지금-여기’의 고통이 사회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반가움의 배경이었다. 심층면접은 2018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과거 자료로 보충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가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

〈표 1〉 연구 참여자

참여자	수용 시설	수용 시기	연고/보호자	수용 시 연령	수용기간	사회복귀
A씨	서산개척단	1961년	없음	20세	5년	수용소 외해
B씨	서산개척단	1963년	없음	14세	3년	수용소 외해
C씨	서산개척단	1962년경	있음	8-9세	4년	탈출
D씨	선감학원	1968년	없음	12-13세	5년	탈출
E씨	선감학원	1970년경	있음	12세	3년경	탈출
F씨	형제복지원	1984년	있음(보호자위탁)	8세	3년	수용소 외해
G씨	형제복지원	1982년	있음	14세	4년	보호자
H씨	형제복지원	1982년	있음	11세	5년	수용소 외해

#### 4. 수용소, 사회로부터의 소거

##### 1) 무차별적 단속과 강제 격리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기를 거쳐 고아, 도시하층민 등이 증가하면서 부랑인이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된 이래로, 부랑인은 사회 보호



가 필요한 불쌍한 대상인 동시에 사회 질서와 치안을 위협하는 존재로 양면화돼 담론화되어왔다. 이에 따라 보호책과 근절책이 제시됐지만(박홍근 2014, 26), 그 대책은 일제단속과 집단수용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부랑인 정책은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에 이르러 큰 변화를 맞는다. 군부정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사회의 부패와 구악의 일소'를 내세웠고, 이때 처리해야 할 '사회악'으로 호출된 것이 바로 부랑인이었다(김아람 2011; 박홍근 2014, 25). 부랑인을 '생산적 주체', 혹은 산업전사로 재탄생시키려는 의도였든(김아람 2011; 이상록 2011), 아니면 수용소 밖 생산적 주체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든(박홍근 2014), 수많은 부랑인들이 사회질서 확립의 미명하에 단속되고, 수집되어, 격리됐다. 1970년대 들어 부랑인 정책은 더욱 체계화된다. '사회악'과 '사회 부적응자'로 재현된 부랑인에 대한 국가 정책은 '복지'라는 미명하에 민간단체가 부랑인 수용소를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변화된다. 사회 부적응자를 위한 자활, 자립의 미명하에 부랑인에 대한 격리 수용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정수남 2018). 그리고 이 연장선 위에서 1980년대에는 도시환경미화 사업의 일환으

- 
- 5) 정수남은 당시 국가가 추구했던 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복지는 부랑인을 인간 존재로서 보장될 기본권과 사회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기보다는 사회계발의 기획에 강제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국가권력의 한 통치기능에 불과했다”(정수남 2018, 290).

로 부랑인 정책이 강화됐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같은 국제적 행사에 대비해 깨끗하고 치안 좋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권위주의 정부하의 부랑인 정책을 통해 부랑인은 범죄와 불온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부랑인에 대한 국가 통제와 자유의 제한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는 제도적 장치와 문화적 담론이 형성됐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이러한 정책과 담론에 포위돼 있었다. 가난한 아버지에 손에 이끌려 수용소에 보내진 단 한명을 제외하고는 7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20여 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후리가리’를 통해 수용소에 강제격리, 수용됐다. 당시 이들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보호자 또는 연고지가 있었던 경우다. 이들은 하룻길에 혹은 따로 살던 어머니나 친척집을 방문하던 길에 영문도 모른 채 붙잡혔다.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 이름이나 집 주소, 혹은 재학 중이던 학교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부랑이라 볼 수 없었고, 신원조회를 통한 귀가 조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을 집이 아닌 수용소로 보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이 단속되어 수용소로 보내졌는지 알지 못했다. 또한 신분확인을 위해 가족과 연락할 어떤 수단이나 정보, 수용될 수용소에 대한 정보나 동의도 일체 제공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당시 부랑인 단속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무차별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권위주의 정권은 부랑인 단속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고자 했고(국가인권위 2018, 64), 수집의 수는 경찰과 위탁받은 개인의 업적으로 평가됐다(국가인권위,

2018; 김아람 2011, 331; 신민당 1987).

“학교 수업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로 데려가 가방을 뒤지더니 급식 받은 빵을 꺼내며 ‘어디서 훔쳤노? 바른 말해라’. 훔치지 않았다면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는데 라이터로 고추를 지지며 고문까지 해, 너무 아파서 ‘제가 훔쳤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곧바로 형제복지원으로 보내버렸어요.” (G씨)

“아버지랑 서울 작은 아버지 댁에 가려고 대전역 광장에 있었어요.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관 2명이 온 거야. 그때 내가 한 8살 됐는데, 아버지를 끌고 역전 파출소로 데리고 가는 거야. 좀 물어볼 게 있대. ...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막 잡혀오는 거야. (중략) 차에 까만 커튼을 쳐서 안에서 안 보여. 그 버스를 앞사람 등을 잡고 죄인처럼 탔어. 그리고 어디를 가는데, 가보니까 수백 명이...” (C씨)

두 번째는 정부가 불량인으로 호명해 분류했던, 고아거나 보호자 없이 길거리나 다른 시설에서 생활했던 이들이다. 일부는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며 역이나 다리 밑에서 난장을 치거나 밥을 구걸했고, 또 누군가는 남의 뒤를 봐주며 생계를 해결했다. 신문팔이, 구두닦이 등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며 학업을 이어가던 경우도 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정부의 불량인 범주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신은 단속 및 수용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자신과 수집 대

상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한다는 점이다. 억울한 수용이라는 주장이다.

“내가 조직에서 중간보스정도 됐겠네요. 내 밑에 동생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 세월동안 내가 해코지한 일은 없어. 형무소 갈만큼 안 했어요. 16살까지는 신문팔이, 구두닦이하고 살다가 극장이나 카바레 같은데 뒤편하고 먹고 살았어. 그것도 오래 못 해봤어.” (A씨)

“제가 고아원에서 도망 나와 가지고 야간 중학교에 다녔어요. 낮에는 구두닦이를 하고 저녁에는 권투를 했어요. 배고픔에 권투하면 돈 번다고 해서 권투했어요.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불량배랑 시비가 붙어서... 그때 잡혀간 게 서산이야.” (B씨)

이는 객관적 사실일 수도 있고,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주관적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 모두가 정부의 불량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보다는 자신이 수집 대상자임을 부인하거나 무고하다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피해생존자들은 오랜 시간동안 불량인을 위협시키거나 불온시하는 제도와 담론, 사회적 냉대에 노출되어 살아왔다. 이런 사회분위기는 불량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이들 자신들조차 불온한 불량인과 자신을 구분하여 자신은 순수한 피해자의 위치에 놓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편으로

는 과거사 청산의 와중에서 자신과 동료들이 무고한 피해생존자로 재현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문제가 사회화되기 어렵고, 이후 진상 규명과 피해보상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초한 언술일 수도 있다. 피해자의 대항 담론은 종종 사회가 요구하는 목소리를 중심으로 서사화 되기 때문이다(이소영 2014, 266).

## 2) 자신과 관계로부터의 완전한 절연

“버스 내리기 전에 거기 직원이 하나 올라오더니 너희들 여기 온 걸 환영한다. 여기는 인간 채생장이다. 거기서 공시령 거리는 애들은 반 죽는 거야. … 내렸는데 사회에서 입고 온 옷은 무조건 다 벗어. 전부 다 벗겨서 발가벗고 그리고 천 팬티 하나씩 입고 윗도리도 안 입고 OO산이라는 곳을 데리고 갔어. 그때가 2월 달이니까 얼마나 추워. 맨발 벗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무조건 다 처넣는 거야. 그 추운데.” (A씨)

“가자마자 머리 다 뺏뺏 밀고. 여름에는 하얀색 그거, 옛날 중·고등 학생들이 입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벌. 겨울에는 까만 학생복 있죠, 그 한 벌로 지내는 거야.” (D씨)

이들이 수용소에 격리돼 가장 먼저 당한 일은 자신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절연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모든 것, 소지품은 물론이고 옷, 신발, 머리카락까지 상실한 채 별거벗겨져 수용

소에 맞게 개조될 것을 강요받았다. 나아가 이름을 빼앗겼다. 주로 별명이나 “야” “너” “이 새끼” 등으로 명명되었는데, 형제복지원은 수용자 개개인에게 수용 번호를 부여한 뒤 이들을 호명하고 관리했다. 이렇듯 수용소 생활은 한 인간 존재의 신체에 대한 독재적인 통제를 행사하면서 개인의 고유성, 존엄성을 훼손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하금철 2017, 129).

이후 모든 피해생존자들은 극도의 굶주림, 무지막지한 폭행, 잔혹한 학대, 일상적 욕설과 협박 등에 시달렸다. 가혹행위의 양태는 달랐지만 일상적 공포를 통한 심신의 지배라는 양상은 동일했다. 또한 강제노동에 동원됐다. 서산개척단에서 강제노동이 폐염전 개간을 위한 노동력 착취의 목적이 강했다면, 선감학원에서의 강제노동은 원생들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 강했다(국가인권위 2018: 86-87). 형제복지원의 경우 두 경향이 공존했다. 성인들의 강제노동은 노동력 착취가 목적이었다면, 아동들에게는 정신적 압박, 통제수단의 경향이 강했다. 복지시설을 표방하고 수용인원에 따라 보조금의 규모가 달라졌다는 점에서 형제복지원에서 아동은 생산목적으로 동원되기보단 노동을 통해 관리되어야 할 존재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신체는 침범당하고 학대당하고 상처 입었다. 영혼에도 큰 상처가 생겼다. 인간은 몸 안에서 살뿐만 아니라 몸을 통해서 살기 때문이다(프랭크 2017, 25).

“나는 순진하게 선생한테 집에 간다고 들었는데 왜 안 보내주냐 애

기를 했어요. ... 며칠 뒤에 사장한테 곡괭이 자루로 무진장 두들겨 맞았어요. (중략) 그리곤 맨발로 해가지고 두 시간씩 운동장에 세워놓는 거예요. 팬티 바람으로 해서. 어마 어마하게 추웠어요. 그렇게 이틀 됐는데 발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발이 양으로 퐁퐁 부었는데 왼발이 한 달이 넘어가자 시커멓게 죽어가는 거예요, 전체가. 끝에서부터 굵아서 뼈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E씨)

“폭행하고 얼차려 하는 건 기본이에요. (중략) 소대장이나 서무가 ‘다 구리’라고 외쳐요. 폭행하라 이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을 발로 밟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밟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잘 때까지 기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H씨)

“일이 제일 싫었어요, 좌우지간. 일이 일 년 내내 그치지가 않아요. 일부러 뺨에 물리는 애도 있어요, 부상당하면 열외 시키니깐. 저도 일 부러 마차 바퀴에 제 발도 넣어봤어요.” (D씨)

동성 간 위계와 물리적 강압에 의한 성폭행도 일상적이었다. 하지만 많은 피해생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하기보다 “들었다”라는 맥락에 성폭행을 위치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3명의 피해생존자는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증언했다. 성폭행은 다른 폭행과는 다른 양상의 공포는 물론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시켰다. 또한 비슷한 처지의 같은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인 조롱과 비하의

대상이 됐으며, 2, 3차 가해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서산 개척단에서는 다른 형태의 성적 폭력도 발생했다. 강패, 부랑인과 윤락여성의 결합을 통해 사회정착을 증진시킨다는 미명하에 수용자 간의 합동결혼식이 강압적으로 추진됐다. 이는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들에게도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참고로 당시 여성들을 강제 결혼을 목적으로 끌려왔기에 훗날 서산개척단 피해생존자들은 이 여성들을 ‘한국관 위안부’로 명명하기도 한다.

“성폭행이 최고 힘들었지요. 온갖 별명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똥띠’라고 몇 달 동안 조장한테 엄청 시달렸죠. 똥띠라는 게 ‘똥구녕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OO 친구가 똥띠 1, 내가 똥띠 2로 불렸어요. 일상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G씨)

“여자들도 잡아다가 대기반에 데려다놓고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이름도 성도 모르고. 여기서 남자가 하나 나오면 저서 여자가 하나 나오고, 개들이나 짐승들도 그렇게 짝짓기는 안 할 텐데 그런 식으로 부부를 만들어주는데, 참 기가 막힌 거야. 나야 장가갈 나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고 막사에 앉아 있는데, 뭐야, 이 새끼는 왜 안 나가냐고. (중략) 내가 무서워서 걸어 나갔는데, 상대방은 대학교 당기가 방학 때 엠티를 갔다가 붙들려 온 거여. 맨날 우는데, 맨날 보내줄 수 없냐고 …. 겉으로는 결혼식도 하고 참 화려하지. 하지만 그 속에는 전부 눈물과 억울함 분노만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잊어버리려



고 노력 엄청했지.” (A씨)

수용소의 운영은 정확히 수용자의 신체적 통제력을 빼앗고 지배하며, 지속적인 공포를 통해 인간 존재로서 존엄을 모욕하고 파괴해 완전히 복종하고 종속시키는 데 맞춰졌다(허먼 2012, 108). 이 과정에서 수용자들은 친밀한 관계 혹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조차 인간 이하로 대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동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조차 파괴된 것이다. 일례로 동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신체적, 물리적 위계에 따른 성폭행과 구타, 가혹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수용소 운영자들은 나이가 많거나 말을 잘 듣는 수용자를 선발해 간부 직책을 부여하고 수용자들을 관리, 통제하게끔 했는데 이것이 완장이 됐다.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구조 하에서 피해생존자들은 가해자의 행동과 신념을 체득해 내면화하거나 사실상의 자발적 복종상태에 놓였다. 수용소 안에 ‘작은’ 수용소는 그렇게 동료 수용자들에 의해 탄생된 지옥이었다.

“매 맞는 것보다 배고픔이 더 미치겠더라고. (중략) 하루는 야간 수로작업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한 사람이 없어. 하나 도망갔다고 뒤지게 맞았어. 다음날 작업을 가니까 빨에 팔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 요렇게. 수로가 무너져서 죽었는데, 그걸 보고 내가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그거보다는 당장 소금물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려고 서로 뺏고 ….” (A씨)

“조장들이 나를 세워놓고 (친) 누나를 짓밟으면서 하는 말이, 누나에게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내게 욕을 강요하면서 했던…” (F씨)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심리적 통제는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도덕적 원칙을 위반하고 인간에 대한 기본 애착을 배신하게 될 때 완성된다. 굴복한 피해자가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고 “속박 속에서 피해자가 또 다른 이를 희생시키는 데 동참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그는 참으로 ‘파멸하게’ 된다”(허먼 2012, 148-149). 이를 통해 수용자들을 “고통과 욕구만 남은, 존엄성이나 판단력을 잃어버린 텅 빈 인간”(레비 2007, 35)이 되거나, 이로 전락될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당시의 파멸의 경험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지금-여기’ 피해생존자들에게 응어리진 수치감과 죄책감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또한 피해생존자들 내부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가해와 피해의 문제가 북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증오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한편 잔혹한 수용소 생활에 자해와 탈출 시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만 운 좋게 성공했을 뿐, 다수는 폭력적인 고통, 나아가 죽음을 대면해야 했다.

“(연구자 주 - 탈출했다) 꿈쩍없이 잡혀갔죠. 데고 가서는 운동장에 비 오는 날 빠지지 말라고 굴 껍질을 아주 많이 갈아 냈는데 거기다 원산폭격을 시켜요. (중략) 머리가 찢겨가지고… 그 다음엔 원생들을 줄 뺏따 때리는 거예요. 열한 명을 돌아가면서 때리다가 지치니깐 우

리끼리 서로 때리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혹한지 알아요? 처음에 딱 때릴 땐 나도 세계 못 때리잖아요. 그런데 하다보면 이 새끼가 나보다 더 세계 때리는 거 같아. 그러니깐 나도 있는 데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볼들이 시뻘게져 가지고 … . 그렇게 참혹하게, 우리끼리 서로 죽이겠다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D씨)

“제가 아침에 점호 서는데 어떤 아저씨가 가슴에 피를 흘리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성기를 잘라가지고 목에다 걸고 나왔더라고. ‘아저씨 피나?’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 아저씨는 그렇게라도 거기서 나오려고 자기 성기를 자른 거예요. 그게 제일 끔찍했었고, 또 김OO씨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도망가다 실패해서 잡혀오니까 작두 있죠? 그걸로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게 안 잘라지니까 몇 번해서 잘라버렸어요. 그거 보니까 아이고, 잔인해도 저렇게 잔인할 수가 싶더라고요.” (B씨)

일부는 살아남아서 수용소의 참혹했던 일상을 증언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수가 불귀의 객이 됐다. 굶어죽고, 앓다죽고, 맞아죽고, 일하다 죽고, 탈출하다 죽었다. “내 눈으로 본 맞아 죽은 사람이 22명”이라는 한 연구 참여자의 증언처럼 서산개척단의 경우 서산희망공원 무연총에만 200여 명이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sup>6)</sup> 선감학원의 경우

6) 이 묘는 서산개척단 민주화조치 이후 생존자들이 뒷산에 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시

1955년부터 1982년까지 공식 사망자는 24명이다. 그러나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조사에 따르면 주변에 약 135~170여 개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경기도 2017, 56).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2년간 공식적으로 최소 551명이 사망했다.<sup>7)</sup> 시신 중 일부는 뒷산에 암매장됐다. 시신 중 일부가 팔려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sup>8)</sup> 수용소는 그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대했고, 그리하여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갔다(계이 2018, 65).

트라우마, 즉 외상이 충격적 사건 경험에 뿌리를 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선 설명들, 수용소의 압도적 공포와 극단적인 폭력 등이 외상 원인이 되었음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외상이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도 구성된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상 경험이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 수용되고 의미화 되었는가이다. 이는 외상 과정에 대한 것으로 다음 장에서는 이를 살펴볼 것이다.

---

신을 수습해 모아 만들었다. 서산개척단 민주화조치와 관련해서는 김아람(2018)을 참고할 것.

- 7) 초기 알려진 사망자는 531명이었는데, 최근들이 추가 사망자가 확인되면서 공식 사망자는 2018년 10월 현재 551명이다.
- 8) “우리는 사체가 병원 등에 실험용으로 팔려간다는 면담자 주장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적어도 (연구자 주- 형제복지원에서 발행된) 새마음지에 기재된 사인 과 사체 인계 등의 기록은 많은 경우가 허위 기재이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신민당 1987). 하지만 이에 대한 진상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

## 5. 더 큰 수용소로서의 사회

### 1) 가족의 해체와 부랑화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 복귀는 두 가지 경로를 따랐다. 하나는 탈출, 또 하나는 수용소 와해에 따른 복귀였다. 그러나 복귀 경로의 차이와 달리 이들은 크게 동일한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한다. 우선, 가족의 해체다. 입소 전 가족이 있던 5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가족의 해체를 경험했다. F씨는 함께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아버지와 누나가 형제복지원의 잔학 행위가 원인이 돼 정신병원에 감금돼 홀로 남겨진 경우다. G씨는 동생과 함께 가족에게 돌아갔지만 동생은 형제복지원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아버지와 함께 서산개척단에 입소한 C씨는 서산개척단에서 아버지를 잃었다. H씨의 아버지는 행방불명된 자식을 찾아 전국을 헤매다 알코올중독에 따른 간경화로 사망했다. E씨는 겨우 가족을 찾았지만 어머니는 재혼한 뒤였고, 아버지는 몸져누운 뒤라 마땅히 거처할 곳조차 없었다.

이렇듯 이들의 수용소행은 가족의 불행을 초래하거나 강화하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 피해자지만 스스로를 가족 불행의 가해자로 인식하면서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는 이유다. 한편 가족이 해체됐다는 건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 인간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울타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즉 수용소에서의 고통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공감 받을 사람은 물론이고 세상과 사회에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변한 자신의 손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친밀한 사회적 지지체가 상실된 것이다.

두 번째는 방황이다. 수용소 생활 내내 이들이 원했던 것은 자유였다. 이 때문에 간 곳이 집이든 시설이든, 처우의 좋고 나쁨을 떠나 규율과 단속에 속박되는 것에 대한 깊은 불안과 거부가 존재했다. “눈치가 보인다” “억매여 있다” “간혀 있다”... 수용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갑갑함과 답답함이 이들 내면에 요동치고 유동했다. 거리 경험이 전무했던 이들조차도 거리 생활을 선호했을 만큼, 부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연구 참여자들이 수용소 생활을 통해 부랑인화되어, 부랑인으로 성장할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서 확인되는 공통점으로 속박을 강하게 거부하는 하나의 외상 증후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집에서 나와 강이 보이는데서 박스 깔아놓고 잠도 자고 그렇게 했었어요. 형제복지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건 엄두도 못 냈죠. 잠은 꼭 집에서 자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에 들어가면서부터 부랑아, 부랑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눈치가 보였고 구박을 당했고. 거리낌 없이 집이 아닌 다리 밑에서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G씨)

“(연구자 주 소년의 집에는) 문도 잠그는 사람도 없고 점호하는 사람

도 없고. 근데 이런 환경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5명, 저기서 5명 해가지고 가출을 하는 거예요.” (H씨)

사회 복귀 후 단절된 학력을 이어간 연구 참여자는 단 한명에 불과했다. 스스로도 “로또”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그는 학대 없는 시설에 인계됐으며 시설 관계자의 애정 덕분에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7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중졸도 안 되는 낮은 학력으로 세상과 마주해야 했다. 참고로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은 당시의 평균 학력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편에 속하는데, 1965년 자료에 따르면 당시 서산개척단 수용자의 70% 이상이 무학이었고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10%에 그쳤다(김아람 2018, 7). 당시 중학교 진학률이 54.3%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치다(한겨레 2005/08/03; 서울신문 2005/01/27).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82%가 초졸 이하의 학력이었다(국가인권위 2018, 105~106).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된 이들에게 당장 닥친 문제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였다. 수용소 출신 부랑인이란 편견에, 낮은 학력, 보증 설 사람조차 없는 이들에게 세상의 벽은 너무 높았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 국가가 그런 건 잘 만든 것 같아. 누구 원망하고 그런 거 다 사치예요. 원망도 내가 배도 따듯하고 먹고 살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중략) 너무 힘들었죠. 계속 잘리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죽

고 싶은 생각이 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자살 시도도 세 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E씨)

“거기(연구자 주- 서산개척단)서 야반도주해서 서울 세운상가 앞에서 구두뒹이도 하고 하다못해 서커스에서 곡예도 배우고. 전국을 2년 동안 다 다녔죠. 갈 데가 없으니까, 나를 받아줄 데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버스에서 볼펜도 팔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누가 10원짜리 하나 보태 준 사람이 없습니다” (C씨)

가난, 낮은 학력, 부랑인 기표에 대한 편견과 멸시 등 세상과의 불화는 범죄로 이어졌다. 8명의 연구 참여자 중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소위 평범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6명은 다양한 인생 경로를 거쳐 20대 중후반이 되면 뒷골목, 건달, 갯패 세계와 어떤 식으로도 연관된 삶을 살게 됐다. 이는 세상과의 불화에 따른 고립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스스로 안전감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패막이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경로는 이들이 피해자에서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가 될 위험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8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수용소 입소 전 전과가 없었으나 사회복귀 이후 5명이 전과자가 됐다. 한명이 운 좋게 징역을 피한 경우라 사실상 6명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범죄는 사기, 절도, 폭행, 마약, 방화, 나아가 강도 살인 등에 걸쳐있다. 한편 연구 참여자 중 선감학원 연구 참여자 2



명은, 당시까지 특별한 범법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랑인 수용소 출신이라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었다. 삼청교육대 입소 전력과 경험은 이들의 취업과 사회관계에 복합적 난관으로 작동했고, 세상과 국가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확대되고 위상이 강화되는 또 다른 주요한 배경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당시 표방된 부랑인 정책의 목표와 세 수용소의 설립·운영 목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부랑인 정책과 수용소의 폐해를 통해 수용자들이 향후 빈곤화되고 범죄화 되었으며, 삶과 정서적 지지망의 계속된 파괴로 위상을 촉발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혹은 새로운 위상 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했음을 확인시켜준다.

## 2) 힘난한 사회적 관계 맺기와 고립

사회 정착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 결혼에 성공해 가정을 꾸린 연구 참여자의 경우 애초부터 전과가 없거나 결혼 이후 추가 전과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범죄와 결혼 간의 상관성으로 단순화해 도식화할 순 없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증언은 지지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일차적 사회적 지지 관계에는 결혼을 통해 새로이 구성된 가정뿐 아니라 처가 식구들까지 포함된다. 고아 또는 ‘사회적 고아’였거나 수용소 경험으로 가족이 와해된 환경에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이들에게는 일차적 지지집단의 복구이자 스스로의 신체와 정

신, 나아가 삶에 대한 자신감과 주도성을 확보하고 통제력을 고양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난 집사람을 안 만났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 내가 26살에 결혼을 하는데, 집나가지 않고, 마누라도 있고 새끼도 있다 생각을 하니깐 벗어나가지 않고 그런 험한 생활을 하는데도 빨리 탈퇴하고, 그 세계 떠난 지 한 20년 됐어요.” (C씨)

“(연구자 주-결혼 안했으면) 벌써 죽었을 거. 형무소 가서 타락 되가고. (중략) 우리 처갓집 때문에 더했어, 더 조심해서 살았어. 요 근방에서 내가 말다툼도 안 하고 살았어. 내 잘못이다, 내 잘못했다. 내가 잘했던 소리도 한 번도 못 해봤어. 생전 싸움을 비길라고, 나랑 싸우면 내가 질 놈이 없어.”(A씨)

연구 참여자 중 기혼자는 5명, 미혼자는 3명이지만 모든 연구 참여자가 결혼을 시도한 바 있고, 모두의 결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가장 큰 난관은 공통적으로 가난과 함께 이들이 고아 혹은 ‘사회적 고아’라는 사실이었고, 또한 불량인 수용소 출신이라는 점이였다. 몇몇은 결혼을 반대하는 배우자 가족들과 주먹다툼까지 벌인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 하지만 또 몇몇은 편견과 낙인 앞에서 결혼이 좌절됐다. 이는 이후 ‘방황이 폭주’하고 ‘사회에서 벗어나는’ 배경이 됐다. 사회에서 더욱 깊이 배제되고 고립됐기 때문이다.

“그 여자를 위해서 온전히 내 가정을 새롭게 꾸려나가려는 꿈은 있었죠. 그런데 이놈의 사회가 나를 안 받아주는 거라. 장인 될 사람, 그런 가족들이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고아, 배우지도 못한 놈. 이렇게 해서 낙인찍어버리니까 내가 아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해도 안 먹히는 거지.” (F씨)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고, 아이까지 임신을 했는데, 2년을 도망을 다니면서 집을 얻어놓고 살다가 임신 8개월 때 자기 부모한테 끌려갔어요. 그래서 머리 깎이고. 여자 친구 엄마가 내가 불량인 시설 출신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중략) 거지 호랑이 새끼다, 양아치 새끼다, 그러면서 반대했었어요.” (OO씨)<sup>9)</sup>

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냉대는 연구 참여자들 스스로가 넘어서기 힘든 벽이었다. 1960~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부랑인 정책은 논쟁되지 못했고 강제수용의 담론을 벗어나지 못했다. 수용자들이 수용소 내에서 사투를 벌일 동안, 정부는 서산개척단 단장 민정식과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에게 각각 공익포장,<sup>10)</sup> 국민포장 및

9) 연구 참여자의 신원을 좀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OO로 표기했다.

10) 1962년 광복절에 민정식은 정부로부터 공익포장을(동아일보 1962/09/15), 부인 김태남은 1965년 5월 부랑인 및 윤락여성 선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어머니회로부터 모범 어머니 표창을 받았다(동아일보 1965/05/06).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최종 검색일 2018/09/11).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해 부랑인 선도에 대한 공로를 치하했다.

언론과 여론 역시 수용소 안의 현실엔 무지한 채 수용소를 사회치안 유지와 부랑인 갱생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부랑인은 집중단속, 우범, 범죄, 선도, 갱생, 소탕의 대상으로 언론에 회자됐다.<sup>11)</sup> 물론 간간히 부랑인 수용소의 실상이 언론에 폭로되기도 했다. “원장 등 5명 구속 광주 무궁갱생원”(경향신문 1962/06/17), “서울시내 아동보호시설 설치 기준미달 폭력 등의 부작용”(동아일보 1973/06/26), “부랑아 수용소, 탈출한다고 때려 원생 죽여 암매장”(경향신문 1982/02/20) 등이 대표적이다. 1987년 1월 폭로된 형제복지원 사건에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이 발표한 참혹한 부랑인 수용소의 현실에 언론은 형제복지원을 “생지옥” “살상원” “아오지탄광” “인간모독”으로 명명하며 연일 원장 박인근과 정부를 질타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부랑인 수용자들을 대하는 세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형제복지원 와해 이후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무더기 ‘석방’으로 부산은 물론 여러 지역이 부랑인들의 무법천지가 되었으며, 일반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새로운 수용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을 뿐이다.<sup>12)</sup> 담론과 현실 속 부

---

11) 네이버 뉴스라이브리리를 통해 1960~1980년대 부랑인, 부랑아를 키워드로 검색해 본 결과 부랑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언론보도는 1960년을 전후로 집중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전체적으로 관련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12) 예를 들면 김호선, “부랑인 수용시설 없어 용두산공원에 모여 시민들 혐오감, 새삼

랑인은 여전히 단속되고 격리, 수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존재했다.

이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부랑인 수용소 출신이라는 사실을 함구하는 생존 전략을 구사했다. 5명의 기혼자 중 결혼 당시 배우자가 부랑인 수용소 출신인 걸 알고 있던 경우는 단 한 커플에 불과했다. 나머지 4명은 비밀을 유지하다 최근 들어 부랑인 수용소의 폐해가 사회화되면서 비로소 ‘털어’놓았다. 하지만 자녀들이 아버지의 수용소 경험을 아는 경우는 현재도 드물다. 이러한 사실은 부랑인의 기표가 자신에게 부착되었다는 사실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수용소 경험과는 또 다른 형태의 심리적, 사회적 위축, 혐오와 기피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소영 2014, 269).

함구는 사회생활에서도 유지됐다. 몇몇은 상황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경험을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불이익을 경험하면서 입을 닫았다. 특히 선감학원 출신들은 탈출을 통해 수용소 밖으로 나왔으나 ‘다시 선감학원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인근 섬주민들의 겁박에 의해 몇 년 간 노비 생활을 경험하면서, 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겁박과 냉대를 이미 몸으로 체득한 바 있었다. 따라서 다수가 처음부터 침묵을 선택했다. 부랑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정서적 무시, 제도적 차별, 문화적 편견으로 다양화되어 매우 폭넓게, 일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찾을 대책 마련을”(한겨레 1988/07/28). “부랑인 대책 없나”(경향신문 1988/07/30).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최종검색일 2018/09/11).

“얘기하면 어느 순간엔가 이 사람들이 나한테 대하는 게 틀려지더라고. 아 고생했다 그러더라도 이 사람은 좀 거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냉정해지더라고. 그래서 주의를 해.” (B씨)

하지만 오랜 세월을 걸쳐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구성되고 변형된 고통은 연구 참여자의 신체, 정서, 인지에 뿌리 깊고 지속적인 변형을 가져왔고, 제 스스로 살아남아 외화되고 있다. 절반 정도의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성격을, 눈빛까지 포함해,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포악하다”, “폭력적이다”, “짜증이 많다”, “화가 많다”, “사람들을 못 믿는다”, “사람의 눈이 아니다”… 또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생활에서 비합리적이거나 잘못된 주변사람들의 행동을 참지 못해 직장을 그만둔 적이 수차례라고 답했다. 평온한 일상이 사회에 대한 적당한 속아주기를 통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백상현 2017, 35), 이는 모두 사회적 관계를 맺고 원만한 일상과 사회생활 영위하는 데 큰 걸림돌인 셈이다. 하기에 일부는 상태의 심각성으로 정기적인 정신과 혹은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폭력적으로 변하고, 사회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죠. 폭력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눈매 자체부터가 틀렸어요. … 눈매에서부터 벌써 사람을 경계를 하고 저 사람이 나를 해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G씨)

“한번 돌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돼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거는 처  
 량 같이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 모든 게 하나티지면 다른 사람에게는  
 100프로 사소한 게 맞아요. 하지만 나는 모든 게 응축돼 있다가 터지  
 는 거야. 그게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결국 국가한테 배신당했다는 건  
 데, 그래서 피해의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신병일 수도 있겠죠.”  
 (E씨)

이는 개인의 인성, 의지의 문제이기보단 고통이 발현된 외상 증상  
 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우선 개인의 자의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며 이를 통해 성장한다. 아동기의 반복적인 외상 경험은 성격  
 의 파괴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격을 만들어낸다(허먼 2012, 169).  
 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가 공격적이고 적대적이  
 며, 극단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성인기에 반복적  
 인 외상 경험은 형성된 성격구조의 파괴로 이어진다. 두 번째 외상  
 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과각성이다. 과각성은 위협이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다는 공포에 생리적 각성이 과하게 진행된 상태다. 작  
 은 일에도 쉽게 놀라고 작은 유발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허먼 2012, 71). 마지막으로 이는 외부  
 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로도 볼 수 있다.  
 또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요새,  
 아무도 맞서지 못하는 무적의 존재로 만들고자 했던 생존 전략이 만  
 들어내고 있는 보호막인 셈이다(케이 2018, 35).

### 3) 파괴된 정의와 상처받은 영혼

수용소 경험에 대한 함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왔던 고통 혹은 외상 증후(또는 PTSD)로 이해되고 수용되는 범주의 고통들에 대한 침묵을 강요해왔다. 일례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오랜 기간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왔다. 청소년기에 공포를 경험하고 힘을 빼앗기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청소년기라는 인생의 특별한 단계에서 달성해야 하는 정체성의 형성을 위태롭게 한다(허먼 2012, 113). 이를 감안한다면 매우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한 이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다. 특히 남성 간 때론 동료간 성폭력이었다는 점, 성폭력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심각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자원이 없었다는 점 등은 이들의 혼동과 함께 수치감과 자기혐오를 더욱 증폭시켰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성폭행 피해 경험은 오랜 시간동안 일상적으로 재현되어왔다. 과거의 위협이 현재에도 계속 지속되는 것과 같은 반응으로, 불안과 플래시백 혹은 신체적으로 외화되는 고통이다.

“지금도 나는 항문이 간지럽지요. 막 관장을 하고 비어내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신체적 반응이 있어요. 같이 오줌 누면 오줌도 안 나오고.” (G씨)



“진짜 저는 여자화장실 들어가고 싶은 적도 엄청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신적으로 좀 미친 것이죠, 정상인이 아니죠. … 또 어떤 경험이 있나면 OO동에 가서 여자 가발을 하나 샀어요, … 일단은 내가 마음이 평온해야 하니까. (중략) 또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풀리겠지, 사라지겠지. 그럼 짧은 시간은 풀려요. 알코올로 뇌를 완전히 다운시키니까. 근데 다시 깨면 또 그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계속 반복 되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없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 지금도 아침에 깨면 신호가 와요.” (H씨)

수용소 경험과 목격한 잔인한 장면이 계속 악몽으로 재현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의식 안으로 거침없이 침입하는 것이다. 기억은 무의식의 상흔이자 고통이며, 피해자는 가장 잊고자 하나 가장 잊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진짜 많이 죽었어요. 내 눈으로 본 맞아 죽은 사람이 22명이예요. 내 어린나이에 그걸 봤어요. 진짜 잔인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꿈에 나타나요. 가끔가다 내가 울어요.” (B씨)

“수십 년 간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그 악몽을 수십 년 꿰어요. 그리고 나면 자다가 일어나서 몸서리치게 내가 소리 지르고 하면 마누라가 왜 그러냐. 꿈 이야기도 부인에게는 못하겠더라고.” (C씨)

과거는 단순히 끝나거나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김무용 2011, 202). 평생을 관통하는 고통이지만 이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들의 고통을 더욱 증대시켜왔다.

또한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점은 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는 2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은 사회복귀 초기, 방향은 깊었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의 플래시백이나 악몽과 같은 외상 증후를 경험하진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생 굴곡이 많아지면서 증상은 몸집을 불렀고, 한번 터진 플래시백, 악몽은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됐다. 즉 수용소가 외상의 발단이었지만, 외상은 연구 참여자들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에 의해 재구성되고 누적되고, 증폭되었다. 또한 고통을 호소하고 위로받을 수 없음이 이를 강화했다. F씨의 증언은 외상의 사회적 구성을 잘 보여준다.

“처음에 사회 나왔을 때는 열심히 살았죠.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쫓겨나는 상황을 계속 당하고 그러면서 형제복지원 기억이 계속 더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선택한 것이 화가 나고, 그 뭐라고 하지, 우울증에 가깝다고 해야 하나?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온 거죠. 불신의 단계가 접어들고 나서 선택한 것이 중독.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슬로도 해결이 안 되서 선택한 것이 본드. 밥보다는 본드를 더 많이 했었으니까. 본드를 취하게 되고 죽기 직전까지 하다가, 내가 이렇게 쉽게 죽으려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아닌데 난 뭣 때문에 살고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러면서 나름대로 살아

보려고 하는데 사회적 구조가 나를 안 받아줄려고 하는 걸 알고 자살 (시도-연구자)을 한번 했었죠. 그런 과정이 계속 무한 반복돼요. 중독 과 자살의 그 경계선 사이에.” (F씨)

사람이 아닌 사물, 비인간적인 것에 의존하고 중독된다는 것은 배신을 차단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전략이다. 사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나를 판단하는, 소외시키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sup>13)</sup> 하지만 중독으로도 고통이 완화, 경감되지 않을 때, 사회적 분노가 더욱 커질 때 무기력한 이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해나 자살이다. 신체적 고통을 극대화시켜 존재의 실존을 확인하거나 죽음을 통해 고통을 해소하고 완전한 자유와 평온을 얻으려는 시도인 것이다.

한편 가해자들은 온당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 피해에 대한 사과와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가중되고 외상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이유다. 서산개척단 수용자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일군 땅이 국유화되면서 소송으로도 끝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빚을 내고 땅을 매입해야 했고 이는 우울함과 화병의 근원이 됐다. 지나간 억울한 세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거부되었기

13) 용산참사에서 살아남은 5명의 피해자를 다룬 다큐멘터리 <공동정범>은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또는 고통을 말할 수 없기에 비인간적인 것에 집중하는 이야기가 잘 담겨 있다.

때문이다. 또한 가게 경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자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전두환 정권의 외압과 비호 하에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으며, 법원 역시 수용자들에 대한 특수감금죄 여부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박인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인근은 횡령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 만을 복역하고 석방돼, 복귀했다. 당연히 단죄 받았을 줄 알았던 박인근이 거리를 활보하자 피해생존자들의 고통과 외상 증후 역시 증폭됐다. 하지만 가해자는 너무 멀고 높은 곳에 있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죄를 묻지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을 체감하게 된 이들은 오히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탓함으로써 신세한탄, 자기 비하,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려왔다. 고통은 더욱 개인화·개별화되었고, 이는 고통에 대한 체념과 방치, 적응을 강제했다(윤충로 2014, 29). 이렇듯 고통은 과거완료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 6. 사회적 치유와 정치적 책임

본 논문은 1960~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의 부랑인 정책에 의해 부랑인 수용소에 강제 격리, 구금됐던 피해생존자들의 수용소 경험과 그에 따른 고통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사회화된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은 수용소 경험에만 한정되

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외상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 즉 의미 화하고 수용하고 재현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고통을 수용소 경험에만 한정해 사고하는 것은 매우 단선적이며 단편적인 이해다. 피해생존자의 전 생애 전 과정을 통해 바라 볼 때만이 부랑인 정책, 그에 따른 부랑인 수용소의 폐해와 국가 폭 력의 문제를 제대로 사고할 수 있다. 또한 현재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해생존자들은 ① 부랑인 수용소에서의 폭력 적이고 파멸적인 경험 ② 부랑인화, 빈곤화, 범죄화됨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부적응 ③ 사회적 편견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위축, 침묵의 강제 ④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고통을 경험해왔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고통 이 과거완료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데 있다. 더욱 가중되고 증 폭될 위험성이다. 한편 현재 피해생존자들이 직면한 고통은 수용소 에서 자행된 잔혹한 폭력과 공포, 생을 관통한 빈곤과 범죄,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넘어선다. 보다 근본적으로 자아를 형성하고 성장시 키는 관계와 상호 인정이 거부되거나 파괴됨으로써 무시되고 모욕 받은 삶과 존엄에 관한 문제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고통의 치유를 위해 부랑인 수용소에 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진정한 사과와 희생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접 행동을 벌이며 과거사 청산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은 사회 전체에

부랑인 정책의 폐해를 알림으로서, 이 고통이 사회적인 것이며 자신이 부당한 피해자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고통을 사회적으로 치유하고,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를 새롭게 조망하고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통감각을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알렉산더가 주창한 것처럼 긍정적 의미의 문화적 외상을 형성하기 위한 외상 과정인 셈이다.

이때 요구되는 건,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책임이다. 피해생존자들의 고통이 수용소 안을 넘어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만들어지고 증폭되고 강화되었다는 자각과 성찰로부터 우리 사회는 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고통에 대한 이해를 넘어 고통을 함께 치유하고 외상 과정에 동참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공간적 경계에 매이지 않는 책임을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이 이의 재고에 기여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맺으며 연구의 한계에 대해 기록해놓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세 개의 수용소를 대상으로 각 수용소 피해생존자들의 공통적 경험에 기반해 논의를 전개했다. 권위주의 정부의 부랑인 정책에 따른 수용소 안과 밖의 폐해를 사회적 고통이란 관점으로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대별, 목적별, 운영 주체별 특징과 상황에 따른 세분화된 고통은 일반화, 추상화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남겨진 과제다. 연구 참여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질적 연구가 갖는 한계도 존재한다. 피해생존자들의 삶에도 매우

큰 간극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점이다.

~~중략~~

## 참고문헌

- 강덕영. 2018.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부랑인 시설로 본 한국 현대사.”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연속기획강좌 발제문.
- 강은숙. 2011. “저항집단의 생애사를 통해 본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과정 - 5·18 시민군기동타격대의 ‘상처받은 5월 정신.’” 성공회대 사회학과 석사 학위논문.
- 게이, 룩산. 2018. 『헝거: 몸과 허기에 관한 고백』. 노지양 역. 사이행성.
- 경기도. 2018.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 \_\_\_\_\_. 2017.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최종 보고서』.
- 국가인권위. 2018.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보고서』.
- 김명희. 2016. “고통의 의료화와 치유의 문법.” 김명희·김왕배 엮음.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 김무용. 2011. “과거청산 작업에서 진실말하기와 대한 내러티브 주체의 형성.” 『한국사연구』. 153. 191-237.
- 김아람. 2018. “1960년대 개척단의 농지조성과 역동적 정치.” 한국사학회 2018년 3월 연구발표회.
- \_\_\_\_\_. 2011. “5.16 군정기 사회정책- 아동복지와 부랑아 대책의 성격.” 『역사와

- 현실』. 82. 357-405.
- 레비, 프리모. 2007. 『이것이 인간인가』. 이현경 역. 돌베개.
- 박홍근. 2014. “사회적 배제자의 역사적 형성 연구- 넝마주의 국가동원의 계보학.”  
고려대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백상현. 2017.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 세월호에 대한 철학적 헌정』. 위고.
- 신권철. 2014. “시설수용과 감금의 모호한 경계.” 『사회보장법연구』. 3(1). 1-38.
- 신민당. 1987. “부산 형제복지원 신민당 진상조사 보고서.”
- 알렉산더, C 제프리. 2007. 『사회적 삶의 의미』. 박선웅 역. 한울.
- 와터스, 에단. 2011. 『미국처럼 미쳐가는 세계』. 김한영 역. 아카이브.
- 유혜정. 2018. “형제복지원,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예요.” 『오늘의 문예』. 108.  
72-86.
- 윤충로. 2014. “전장의 일상화와 고통의 재구성.” 『경제와 사회』. 102. 13-46.
- 이상록. 2011.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역사문제  
연구』. 25. 115-158.
- 이소영. 2014.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과  
과거청산 논의의 예에서.” 『법철학연구』. 17(2). 243-274.
- 이현정. 2016. “세월호 참사의 사회적 고통.” 『보건과 사회과학』. 43. 63-83.
- 정근식. 2010. “진실규명과 화해, 어디까지 왔는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결  
산.” 『황해문화』. 67. 86-119.
- 정수남. 2018. “거리 위의 사회악 일소(一掃)와 억압권력의 역설.” 『정신문화연  
구』. 41(1). 285-316.
- 주윤정. 2018. “망각된 1987과 형제복지원.” 『토론회 자료집: 또 하나의 1987 형  
제복지원을 생각한다』. 28-43.
- 최정기. 2006. “과거청산에서의 기억 전쟁과 이행기 정의의 난점들.” 『지역사회연  
구』. 14(2). 3-22.



- 최종숙. 2018. “항쟁의 시대 1987년과 형제복지원사건의 고립.” 『토론회 자료집: 또 하나의 1987 형제복지원을 생각한다』. 16-27.
- 최현정. 2015. “‘PTSD 시대’의 고통인식과 대응: 외상 회복의 대안 패러다임 모색.” 『인지과학』. 26(2). 167-207.
- 클라이만, 아서·다스, 비나. 2002. “서문: 보다 인간적인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을 위하여.” 아서 클라이만 외. 『사회적 고통: 인간의 고통에 대한 사회학적, 의학적, 문화인류학적 접근』. 안중설 역. 서울: 그린비.
- 프랭크, 아서. 2007. 『아픈 몸을 살다』. 메이 역. 봄날의 책.
- 하금철. 2017. “한국의 부랑인 강제수용.” 성공회대 NGO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먼, 주디스. 2012. 『트라우마』. 최현정 역. 열린책들.
-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 2015. 『숫자가 된 사람들』. 오월의 봄.

## Abstract

### Vagabond Institution and Social Pains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victim survivors

Yu, Hae jeong

Sungkonghoe University, Research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ociologically analyze and understand the experiences and the following pains of those who faced forced segregation and detention under the policies on vagabonds by the authoritarian regimes from the 1960's through 1980'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the victim survivors of the three vagabond institution: the Seo-san Pioneer Team, the Seon-gam Academy, and the Hyoungje Welfare Institution, the study proves that the pains the victim survivors suffered throughout their whole life are social in nature.

The pains, which are ongoing yet, have been caused with the abusive and ruinous experiences at the vagabond institution, social strife and maladjustment following becoming a vagabond, social isolation and shrinking-down with social prejudice, and the reality that the past is not properly worked through.

Because of this, the victim survivors make endeavors to resolve the social pains, accelerating the fact-finding movement. The problem is, the past-settlement process leads to another pain and furthermore, it is impossible to make a complete recovery from the damage, where lies the true nature of the pains the victim survivors experience.

■ **Keyword:** Social Suffering, Trauma, Seo-San Pioneer Team, Seon-Gam Academy, Hyoungje Welfare Institution

투고: 2018/10/07 심사: 2018/10/12 확정: 2018/11/01